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 규모와 임금, 상여금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고용 현황

- 03 요약
- 10 광역자치단체 전체 고용 현황
- 12 광역자치단체별 고용 현황
- 17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
- 18 근로조건
- 23 결론

차례

차례	2
요약	3
취지	7
조사방법	9
광역자치단체 고용 현황	10
1. 광역자치단체 전체 고용 현황	10
1) 고용형태별 고용규모와 비중	10
2) 고용형태별 고용규모와 비중 추이	11
2. 광역자치단체별 고용 현황	12
1)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 고용규모와 비중(2012.03 기준)	12
2)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고용규모와 비중 추이	13
3)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기간제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14
4)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파견/용역 고용규모와 비중 추이	15
3.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	17
근로조건	18
1. 임금	19
1)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19
2)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율	20
3)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상여금 지급현황	21
결론	23

16개 광역자치단체 비정규직은 10,664명. 기간제 월 평균임금은 116만원.

- 고용노동부 발표(2011. 11)에 따르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 비정규직은 총 34만명으로 2006년 대비 28,970명(비율 20.1% → 20.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과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우리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
-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부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증가율, 무기계약 전환 규모, 임금 및 상여금 등을 비교, 평가함
- 2012년 3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은 10,664명으로 전체 고용(103,749명)의 10.3%를 차지함.
 - 비정규직은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용역을 합친 것으로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비중으로, 무기계약은 4,963명, 4.8%, 기간제는 4,512명, 4.3%, 간접고용(파견/용역)은 1,189명, 1.1%로 나타남.
 -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분류할 경우, 무기계약 4,963명(46.5%), 기간제 4,512명(42.3%), 파견/용역 1,189명(11.1%)로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파견/용역)이 11.1%를 차지함.
- 2007년~ 2011년까지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정규직(공무원)의 비중은 2.1%p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은 0.2%p, 기간제는 1.2%p, 파견/용역은 0.8%p 증가함.
 - 정규직(공무원)은 2007년 90.0% → 2011년 87.9%로 2.1%p 감소, 무기계약은 2007년 4.5% → 2011년 4.7%로 0.2%p 증가, 기간제는 2007년 4.4% → 2011년 5.6%로 1.2%p, 파견/용역은 2007년 1.1% → 1.9%로 0.8%p 증가함.
 - 2007년~ 2011년 사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고용은 7,119명, 7.2% 증가하였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공무원)이 4,092명, 4.6%, 무기계약이 519명, 11.7%, 기간제가 1,569명, 36.1%, 파견/용역이 939명, 86.2%가 증가함.
-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무기계약, 기간제, 용역/파견) 고용규모와 비중(2012.03 기준)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제주로 전체 고용 중 21.2%가 비정규직임.

전북(20.3%), 경기(17.2%), 강원(17.1%), 경남(16.2%)이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보임.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충남으로 전체 고용 중 비정규직 비중은 7.1%임.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10.3%임.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보인 지역은 10곳으로 제주(21.2%), 전북(20.3%), 경기(17.2%), 강원(17.1%), 경남(16.2%), 전남(15.7%), 대전(14.2%), 충북(13.8%), 광주(12%), 울산(11.9%)임.
- 2007년~2011년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무기계약 비중을 살펴볼 경우,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의 지역은 제주, 경남, 경북임. 제주가 2007년 14.3% → 2011년 18.3%로 4%p 증가했고, 경남이 2.5% → 4.3%로 1.8%p, 경북이 4.5% → 6.1%로 1.6%p 증가함. 반면 전체 고용 중 무기계약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으로는, 부산이 2007년 9.6% → 2011년 7.9%로 1.7%p, 대구가 10.9% → 9.7%로 1.2%p, 대전이 6.7% → 5.6%로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 대비 2011년 무기계약의 증가율을 보면 경남이 95%(76명 증가)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북 57.6%(125명 증가), 제주 23.1%(111명 증가) 순으로 나타남. 반면 서울이 2007년 대비해서 12.6%(100명 감소)감소했고, 울산 8.9%(11명 감소), 대전 8.6%(20명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2011년 기간제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의 지역은 울산, 부산, 광주로 나타남. 울산이 2007년 5.9% → 2011년 14.2%로 8.3%p, 부산은 3.6% → 8.6%로 5%p, 광주가 1.4% → 3.7%로 2.3%p 증가함. 반면 전체 고용에서 기간제의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은 전남, 제주, 경북으로 전남이 2007년 20.0% → 2011년 11.4%로 8.6%p, 제주가 8.2% → 1.9%로 6.3%p, 경북이 10.8% → 8.4%로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에 대비해 기간제 증감율을 살펴보면 광주가 204.5%(90명 증가) 울산 175.2%(275명), 부산 173.9%(454명) 증가함. 반면, 기간제의 고용규모가 감소한 지역으로는 제주가 2007년 대비 78.2%(215명 감소)감소했고, 전남 45.7%(223명 감소), 경북 10.5%(55명 감소)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2011년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파견/용역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3개의 지역으로는 경남 2007년 9.7% → 2011년 13.5%로 3.8%p, 제주 0.2% → 2.0%로 1.8%p, 대구 3.4% → 5.1%로 1.7%p 증가했고, 하위 3개의 지역으로는 전남이 2007년 3.1% → 2.5%로 0.6%p, 광주가 5.2% → 4.9%로 0.3%p, 전북이 2.5% → 2.4%로 0.1%p 감소함. 2007년에 대비해 파견/용역 증감률을 살펴볼 경우에는 제주가 828.6%(58명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강원 266.7%(16명), 울산 177.3%(39명) 등으로 나타난 반면, 유일하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으로 22.4%(17명 감소) 감소했고, 전북은 변화가 없음.
-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834명, 2008년 199명, 2009년 411명, 2010년 349명, 2011년 324명, 2012년(3월까지) 301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18명이 전환됨.
- 2007년~2012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볼 경우, 전환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지역은 전북, 제주, 경남임. 전북이 837명, 제주가 561명, 경남이 324명 전환했

음. 하위 3개 지역은 울산, 대전, 인천으로 6년간 울산에서는 단 한명도 전환되지 않았고,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5명 전환됨.

-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비중은 정체되고, 무기계약 전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직접고용 업무를 파견/용역 등과 같은 간접 고용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공무원)은 396만원, 무기계약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 대비 무기계약은 50%, 기간제는 29.5% 수준임
 - 공공부문의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116만원)은 통계청 “2012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43만원)의 81.1%수준, 기간제 월 평균임금(160만원)의 72.5%수준
 - 광역자치단체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의 수준을 살펴보면, 정규직에 대비해 무기계약의 임금수준이 높은 상위 3개의 지역으로는 서울이 정규직(372만원)의 86.5%(322만원), 인천이 정규직(461만원)의 64%(295만원), 울산이 정규직(404만원)의 58.4%(236만원)로 나타남.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의 수준이 낮은 하위 3개의 지역은 경기, 경북, 제주임. 경기가 정규직(459만원)의 24.7%(113만원), 경북 정규직(478만원)의 27.3%(130만원), 제주 정규직(440만원)의 33.2%(146만원)로 나타났음.
 -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을 정규직 월 평균임금과 비교해 보면, 정규직 대비 기간제 월 평균임금이 높은 3개 지역은 광주가 정규직(352만원)의 35.8%(126만원), 서울이 정규직(372만원)의 33.9%(126만원), 전남이 정규직(353만원)의 31.3%(110만원)로 나타남.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3개의 지역으로는 경북, 대전, 경기로 나타남. 경북이 정규직(478만원)의 18.7%(89만원)로 가장 낮고, 대전이 정규직(370만원)의 23.9%(88만원), 경기가 정규직(459만원)의 24.2%(111만원) 수준임.
- 2007년 대비 2011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면, 정규직은 39만원, 11.6% 증가, 무기계약은 30만원, 18.2%, 기간제 8만6천원, 8.8% 인상됨.
 - 무기계약의 월 평균임금 증가율을 광역단체별로 보면 경남이 2007년 대비 66%(75만원) 증가해서 2011년 월 평균임금 188만원, 전북이 51%(55만원), 163만원, 경기와 강원이 각각 28.7%(34만원), 27.1%(30만원) 증가해 2011년 월 평균임금이 각각 151만원, 141만원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전남(9만원, 6.1%)으로 2011년 162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제주 42.9%(40만원), 울산 41.1%(42만원), 강원 32.2%(25만원)로 나타난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난 5년간 임금증가율이 0%(126만원)임.
- 상여금 지급 여부를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

고 있는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서울,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의 지역임.

- 공공부문은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 첫째, 비정규직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매년 비정규직 사용규모와 근로조건을 공시해야 함
 - 둘째,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셋째, 무기계약 전환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함
 - 넷째, 파견/용역의 직영화로 간접고용 규모를 줄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함.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관행 개선의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급증한 비정규직은 580만 9천명(통계청,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부문에도 34만명(2011.11 고용노동부 발표)에 이룸. 각종 차별(임금 및 근로조건 등)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과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우리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2011. 11)에 따르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 비정규직은 총 34만명으로 2006년 대비 28,970명(비율 20.1% → 20.2%)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기간제는 15.9% → 14.3%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중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파견용역의 비중은 4.2% → 5.9%로 증가함. 즉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비정규직 중에서도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파견/용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사업을 앞당겨 종료¹ 하고, 무기계약 전환에 소극적²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정규직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켰음. 최근 이러한 정책기조를 변경해 현 정부는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지난해 11월 발표하였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1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총리훈령에 따라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비정규직법 사용기간(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되기 하루 전날인 6월 30일 해체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추진된 무기계약 전환 결과, 2007년 무기계약 전환율은 목표(71,861명) 대비 96%(69,029명)인데 비해, 2008년은 목표(16,950명) 대비 88%(14,961명)로 감소. 노동부는 2008년 8월,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린바 있음.

- 공공부문은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 더욱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인 만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참여연대는 지자체,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그 첫 번째로, 지자체의 비정규직 규모, 노동조건을 살펴보고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과 책임을 평가함.

조사방법

- 참여연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2007년~2012년 ①고용형태별 인력현황, ②고용형태별 1인당 월평균임금, ③고용형태별 1인당 연간 상여금 총액, ④고용형태별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⑤연도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규모 ⑥파견·용역(도급)근로자 직종 및 인력현황 ⑦파견·용역(도급)근로자 직종 및 파견·용역(도급)비용 ⑧2012년 민간위탁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교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비정규직 사용현황과 근로실태를 분석함.
 - ※ 광역자치단체의 고용형태별 인력현황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본부, 소방서 등을 포함
-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직접고용 : 무기계약, 기간제
 - 간접고용 : 파견/용역, 민간위탁
 - ※ 무기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임금 등의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이 존재하므로, 비정규직으로 구분함.

광역자치단체 고용 현황

1. 광역자치단체 전체 고용 현황

1) 고용형태별 고용규모와 비중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인력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용역을 포함한 총 고용규모는 103,749명으로 나타남. 고용형태별로 고용규모와 비중을 살펴 볼 경우, 정규직(공무원)이 93,085명으로 전체고용의 89.7%를 차지하고 있고, 비정규직(무기계약, 기간제, 파견/용역)은 10,664명으로 전체고용의 10.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무기계약 및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중은 9.1%, 간접고용 비중(파견/용역)은 1.1%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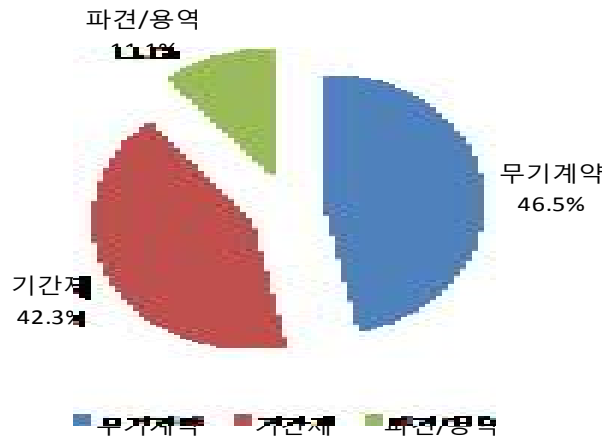
자치단체 중 일부가 파견/용역(서울, 부산)과 민간위탁(제주) 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비정규직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과소추정된 것임.

<표 1> 광역자치단체 고용형태별 고용규모와 비중 (2012.03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12.03	비율
전체	103,749	100.0
○ 정규직(공무원)	93,085	89.7
○ 직접고용 비정규직	9,475	9.1
- 무기계약	4,963	4.8
- 기간제	4,512	4.3
○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	1,189	1.1

※ “비율”은 전체 고용 대비 고용형태별 고용규모의 비율임.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분류할 경우, 무기계약 4,963명(46.5%), 기간제 4,512명(42.3%), 파견/용역 1,189명(11.1%)로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파견/용역)이 11.1%를 차지함.



<그림 1> 비정규직 중 고용형태별 비중 (2012년 3월 기준, 단위 : %)

2) 고용형태별 고용규모와 비중 추이

2007년~2011년까지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07년 90.0%에서 2011년 87.9%로 5년 간 2.1%p 감소했고, 무기계약은 2007년 4.5% → 2011년 4.7%로 0.2%p 증가했으나, 2009년 이후 4.7%로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되어 있음. 기간제는 2007년 4.4% → 2011년 5.6%로 1.2%p, 파견/용역은 2007년 1.1% → 1.9%로 0.8%p 증가함.

<표 2> 2007~2011 고용형태별 고용규모와 비중 추이 (2007~2011 12월 기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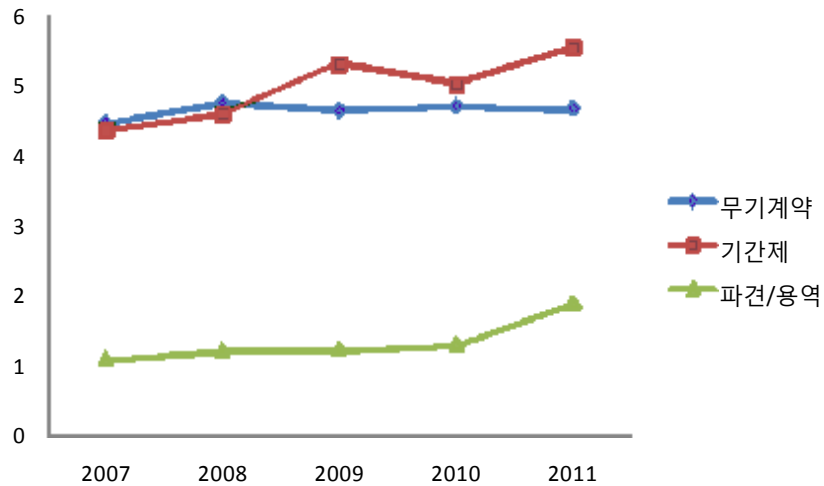
	2007		2009		2011		2007~2011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증감	증감률
전체	99,186	100.0	103,704	100.0	106,305	100.0	7,119	7.2
○ 정 규 직(공무원)	89,299	90.0	92,075	88.8	93,391	87.9	4,092	4.6
○ 직접고용 비정규직	8,798	8.9	10,349	10.0	10,886	10.2	2,088	23.7
- 무기계약	4,451	4.5	4,825	4.7	4,970	4.7	519	11.7
- 기간제	4,347	4.4	5,524	5.3	5,916	5.6	1,569	36.1
○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	1,089	1.1	1,281	1.2	2,028	1.9	939	86.2

※ 간접고용 중 민간위탁 규모에 대한 연도별 자료가 파악되지 않아 파견/용역만이 포함되었음.

2007년 대비 2011년 증감(율)의 경우, 고용형태별 증감율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고용은 7,119명, 7.2% 증가한 가운데, 정규직은 4,092명, 4.6%, 무기계약은 519명, 11.7%, 기간제는 1,569명, 36.1%, 파견/용역은 939명, 86.2%가 증가함.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비정규직 감소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사용은 줄지 않고 있음. 즉 비정규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기간제는 2007년 대비 36.1%나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파견/용역)도 2007년 대비 86.2% 증가함.(민간위탁을 고려하면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와 증가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임).



<그림 2> 2007~2011 전체 고용 중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2007~2011 12월 기준, 단위 : 명, %)

2. 광역자치단체별 고용 현황

1)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 고용규모와 비중(2012.03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 고용규모와 비중(2012.03 기준)을 살펴본 결과, 12개 광역자치단체³ 중 제주가 21.2%로 전체고용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북 20.3%, 경기 17.2%, 강원 17.1%, 경남 16.2%로 순으로 나타남. 반면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충남으로 전체 고용 중 비정규직 비중이 7.1%임.

12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비정규직 사용비중 10.3%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21.2%), 전북(20.3%), 경기(17.2%), 강원(17.1%), 경남(16.2%), 전남(15.7%), 대전(14.2%), 충북(13.8%), 광주(12%), 울산(11.9%) 10곳으로 나타남.

3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자료부존재(미 파악)한 서울, 부산, 인천, 대구는 순위에서 제외

<표 3>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 고용규모와 비중 (2012.03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용역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전체	103,748	93,085	89.7	10,663	10.3	4,963	4.8	4,512	4.3	1,188	1.1
제주	3,300	2,602	78.8	698	21.2	636	19.3	37	1.1	25	0.8
전북	2,162	1,723	79.7	439	20.3	154	7.1	233	10.8	52	2.4
경기	3,894	3,224	82.8	670	17.2	279	7.2	261	6.7	130	3.3
강원	4,843	4,015	82.9	828	17.1	313	6.5	498	10.3	17	0.4
경남	3,298	2,764	83.8	534	16.2	136	4.1	243	7.4	155	4.7
전남	2,227	1,878	84.3	349	15.7	107	4.8	183	8.2	59	2.6
대전	3,764	3,231	85.8	533	14.2	211	5.6	77	2.0	245	6.5
충북	3,441	2,965	86.2	476	13.8	193	5.6	225	6.5	58	1.7
광주	3,509	3,089	88.0	420	12.0	201	5.7	58	1.7	161	4.6
울산	2,753	2,426	88.1	327	11.9	115	4.2	145	5.3	67	2.4
경북	5,286	4,775	90.3	511	9.7	342	6.5	169	3.2	0	0.0
충남	4,204	3,905	92.9	299	7.1	274	6.5	11	0.3	14	0.3
대구*	3,879	3,289	84.8	590	15.2	385	9.9	-	-	205	5.3
부산*	8,106	6,958	85.8	1,148	14.2	654	8.1	494	6.1	-	-
인천*	6,928	6,259	90.3	669	9.7	291	4.2	378	5.5	-	-
서울*	42,154	39,982	94.8	2,172	5.2	672	1.6	1,500	3.6	-	-

※ “-”는 자료부존재(미파악), 서울, 부산, 인천, 대구는 순위에서 제외. 비정규직의 비율로 나열함.

※ 경북의 경우, 파견/용역이 없다고 밝힘. 타 기관의 경우, 청사청소를 용역으로 운영하는 반면 경북은 청사청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30명임

2)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고용규모와 비중 추이

2007년~2011년 무기계약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고용에서 무기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5% → 2011년 4.7%로 0.2%p 증가하였고, 증가율로 보면 2007년 대비 519명, 11.7% 증가함.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 볼 예정이나, 2006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 2008년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이 추진되고, 비정규직법(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라 2009년 7년 비정규직 사용제한 조항(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이 발효된 것을 감안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무기계약 고용 규모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무기계약 비중은 2009년~2011년 4.7%로 정체를 보이고, 2007년에 비해서도 519명만이 증가했음.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이 미흡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별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무기계약 비중을 살펴볼 경우,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

의 지역은 제주, 경남, 경북임. 제주가 2007년 14.3% → 2011년 18.3%로 4%p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경남이 2.5% → 4.3%로 1.8%p, 경북이 4.5% → 6.1%로 1.6%p 증가함. 반면 전체 고용 중 무기계약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으로는, 부산이 2007년 9.6% → 2011년 7.9%로 1.7%p, 대구가 10.9% → 9.7%로 1.2%p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대전이 6.7% → 5.6%로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에 대비한 무기계약 증감률의 경우, 경남이 95%(76명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다음으로 경북 57.6%(125명 증가), 제주 23.1%(111명 증가) 등으로 나타남. 무기계약이 감소한 곳으로는 서울이 2007년 대비해서 12.6%(100명 감소)감소했고, 울산 8.9%(11명 감소), 대전 8.6%(20명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고용규모 및 비중 (12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2011		
	비율 (A)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B)	증감(을)	증감(을)	B-A		
전체	4,451	4.5	4,774	4.8	4,825	4.7	4,918	4.7	4,970	4.7	519	11.7	0.2
제주	481	14.3	452	14.8	506	16.2	555	17.7	592	18.3	111	23.1	4
경남	80	2.5	91	2.9	98	3	120	3.4	156	4.3	76	95	1.8
경북	217	4.5	270	5.4	328	6.5	339	6.4	342	6.1	125	57.6	1.6
전남	107	4.4	107	4.4	107	4.5	107	4.7	107	4.6	0	0	0.2
충북	171	5.5	199	6.1	200	5.9	194	5.6	193	5.6	22	12.9	0.1
전북	145	6.9	145	6.8	156	7.3	172	7.9	152	7	7	4.8	0.1
충남	229	6.6	224	6.2	238	6.1	265	6.3	273	6.4	44	19.2	-0.2
강원	273	6.6	273	6.3	303	6.5	303	6.1	313	6.3	40	14.7	-0.3
서울	792	1.9	808	1.9	720	1.7	713	1.7	692	1.6	-100	-12.6	-0.3
광주	199	6.3	190	5.9	192	5.5	196	5.5	202	5.6	3	1.5	-0.7
인천	-	-	304	4.8	295	4.5	296	4.5	296	4	-8	-2.6	-0.8
경기	291	7.7	294	7.9	281	7.4	279	7.3	279	6.9	-12	-4.1	-0.8
울산	124	4.6	126	4.7	122	3.9	123	4.4	113	3.7	-11	-8.9	-0.9
대전	233	6.7	230	6.3	224	6	214	5.7	213	5.6	-20	-8.6	-1.1
대구	410	10.9	398	10.5	392	10.2	391	10	389	9.7	-21	-5.1	-1.2
부산	699	9.6	663	9	663	8.7	651	8.3	658	7.9	-41	-5.9	-1.7

* "비율"은 해당 년도 전체고용(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파견/용역) 중 무기계약 비중을 나타냄. 인천의 증감(을)은 2007년 자료 부존재로 2008년 대비 2011년으로 집계됨

* 위 통계는 2007 ~ 2011년 전체 고용 중 무기계약 비중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열함. 비중의 변화(B-A)가 큰 자치단체를 상위로 함.

3)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기간제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2007년~2011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고용에서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4% → 2011년 5.6%로 1.2%p 증가하였고, 단순 증가율로 보면 2007년 대비 1,569명, 36.1%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2007년 7월 비정규직법(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기간제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2011년 사이 광역자치단체의 기간제 고용은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별(인천은 자료부존재로 비교에서 제외)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기간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볼 경우, 전체고용 중 기간제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의 지역은 울산, 부산, 광주로 나타남. 울산이 2007년 5.9% → 2011년 14.2%로 무려 8.3%p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은 3.6% → 8.6%로 5%p, 광주가 1.4% → 3.7%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체 고용에서 기간제의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은 전남, 제주, 경북으로 전남이 2007년 20.0% → 2011년 11.4%로 8.6%p나 감소했고, 다음으로는 제주가 8.2% → 1.9%로 6.3%p, 경북이 10.8% → 8.4%로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에 대비해 기간제 증감율을 살펴보면 광주가 204.5%(90명 증가)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울산 175.2%(275명), 부산 173.9%(454명)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는 제주가 2007년 대비 78.2%(215명 감소)감소했고, 전남 45.7%(223명 감소), 경북 10.5%(55명 감소)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기간제 고용규모 및 비중 (12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2011		
	비율 (A)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B)	증감(률)	B-A			
전체	4,347	4.4	4,623	4.6	5,524	5.3	5,255	5	5,916	5.6	1,569	36.1	1.2
울산	157	5.9	201	7.5	570	18.2	256	9.1	432	14.2	275	175.2	8.3
부산	261	3.6	325	4.4	358	4.7	414	5.3	715	8.6	454	173.9	5
광주	44	1.4	72	2.2	125	3.6	125	3.5	134	3.7	90	204.5	2.3
강원	404	9.7	556	12.9	670	14.4	638	12.9	592	11.8	188	46.5	2.1
대구	-	-	74	2	99	2.6	147	3.8	153	3.8	79	106.8	1.8
대전	63	1.8	59	1.6	80	2.1	104	2.8	114	3	51	81	1.2
서울	1106	2.6	1183	2.8	1557	3.6	1728	4	1529	3.6	423	38.2	1
경기	316	8.4	284	7.7	341	9	314	8.2	365	9.1	49	15.5	0.7
충남	8	0.2	8	0.2	8	0.2	11	0.3	11	0.3	3	37.5	0.1
전북	214	10.1	253	11.9	201	9.5	235	10.8	213	9.9	-1	-0.5	-0.2
충북	255	8.2	248	7.6	296	8.8	242	7	262	7.6	7	-2.7	-0.6
경남	232	7.3	214	6.8	227	6.9	242	6.9	217	6	-15	-6.5	-1.3
경북	524	10.8	518	10.4	487	9.7	473	8.9	469	8.4	-55	-10.5	-2.4
제주	275	8.2	128	4.2	141	4.5	91	2.9	60	1.9	-215	-78.2	-6.3
전남	488	20	500	20.4	364	15.2	235	10.3	265	11.4	-223	-45.7	-8.6
인천	-	-	-	-	-	-	-	-	385	5.2	385	-	-

※ “비율”은 해당 년도 전체고용(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파견/용역) 중 기간제의 비중.

※ 위 통계는 2007 ~ 2011년 전체 고용 중 기간제 비중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열함. 비중의 변화(B-A)가 큰 자치 단체를 상위로 함.

※ 대구의 증감(률)은 2007년 자료 부존재로 2008년 대비 2011년으로 집계. 인천은 자료부존재로 순위에서 제외.

4)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파견/용역 고용규모와 비중 추이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파견/용역은 타 업체소속이면서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의 전체고용에서 파견/용역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 → 2011년 1.9%로 0.8%p 증가하였고, 2007년에 비해서는 939명, 무려 86.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파견/용역의 업무분포를 살펴보면, 청소 62%, 시설관리 22%, 개보수, 취사 등 기타 16% 비핵심 업무가 파견/용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13개의 광역자치단체별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파견/용역 비중을 살펴볼 경우, 상위 3개의 지역으로는 경남이 2007년 9.7% → 2011년 13.5%로 3.8%p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제주 0.2% → 2.0%로 1.8%p, 대구 3.4% → 5.1%로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파견/용역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으로는 전남이 2007년 3.1% → 2.5%로 0.6%p 감소했고, 다음으로는 광주가 5.2% → 4.9%로 0.3%p, 전북이 2.5% → 2.4%로 0.1%p 감소함.

2007년에 대비해 파견/용역 증감률을 살펴볼 경우에는 제주가 828.6%(58명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강원 266.7%(16명), 울산 177.3%(39명) 등으로 나타난 반면, 감소한 지역으로는 전남이 22.4%(17명) 감소했고, 전북은 변화가 없었고, 경북 파견/용역이 없다고 밝혔음. 타 지역의 경우 청사청소 업무는 파견/용역으로 운영하나, 경북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인원은 30명임.

4 서울, 부산, 인천은 자료부존재(미파악)로 순위에서 제외함.

<표 6>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파견/용역 고용규모 및 비중 (12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2011		
	비율 (A)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B)	증감(률)	B-A		
전체	1,089	1.1	1,221	1.2	1280	1.2	1,366	1.3	2,027	1.9	938	86.1	0.8
경남	310	9.7	314	9.9	323	9.8	366	10.5	489	13.5	179	57.7	3.8
제주	7	0.2	9	0.3	9	0.3	23	0.7	65	2	58	828.6	1.8
대구	126	3.4	146	3.9	176	4.6	181	4.6	204	5.1	78	61.9	1.7
울산	22	0.8	32	1.2	48	1.5	55	1.9	61	2	39	177.3	1.2
대전	184	5.3	223	6.1	224	6	229	6.1	240	6.3	56	30.4	1
경기	90	2.4	96	2.6	114	3	123	3.2	129	3.2	39	43.3	0.8
충북	39	1.3	83	2.6	59	1.8	73	2.1	60	1.7	21	53.8	0.4
강원	6	0.1	6	0.1	17	0.4	22	0.4	22	0.4	16	266.7	0.3
경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남	14	0.4	14	0.4	14	0.4	14	0.3	14	0.3	0	0	-0.1
전북	52	2.5	52	2.4	52	2.4	52	2.4	52	2.4	0	0	-0.1
광주	163	5.2	170	5.3	168	4.8	169	4.7	175	4.9	12	7.4	-0.3
전남	76	3.1	76	3.1	76	3.2	59	2.6	59	2.5	-17	-22.4	-0.6
인천	-	-	-	-	-	-	-	-	457	6.1	-	-	-
서울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비율”은 해당 년도 전체고용(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파견/용역) 중 파견/용역의 비중.

※ 위 통계는 2007 ~ 2011년 전체 고용 중 파견/용역 비중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열함. 비중의 변화(B-A)가 큰 자치단체를 상위로 함.

※ 서울, 부산, 인천은 자료부존재(미파악)로 순위에서 제외함.

3.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볼 경우, 2007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834명, 2008년 199명, 2009년 411명, 2010년 349명, 2011년 324명, 2012년(3월까지) 301명으로 2007년~2012년까지 총 2,418명이 전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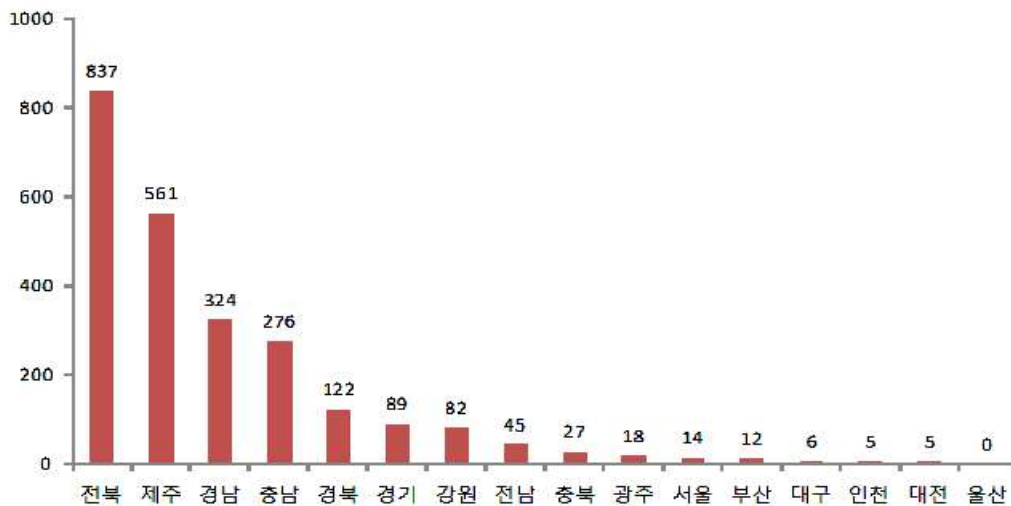
연도별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 볼 경우, 2007년~2012년까지 총 6년간 중 2007년 전환규모가 834명으로 가장 높고, 2009년도에 411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에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이 추진되고, 비정규직법(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라 2009년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사용제한 조항(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발효됨에 따라 이루어진 무기계약 전환 결과로 해석됨.

그러나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기간제의 고용규모와 비중이 2007년 4,347(4.4%), 2008년 4,623명(4.6%), 2009년 5,524명(5.3%), 2010년 5,255명(5.0%), 2011년 5,916명(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파견/용역 근로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의 계약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파견/용역 등의 간접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표 7> 2007년~2011년 무기계약 전환 규모 (2007~2011 12월 기준, 단위: 명)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03
전체	2,418	834	199	411	349	324	301
전북	837	145	0	156	172	172	192
제주	561	254	68	92	63	69	15
경남	324	90	16	34	48	48	88
충남	276	213	20	15	26	2	0
경북	122	46	0	57	19	0	0
경기	89	40	8	23	10	7	1
강원	82	0	48	21	2	11	0
전남	45	22	5	5	2	11	0
충북	27	0	25	2	0	0	0
광주	18	11	0	0	4	1	2
서울	14	7	6	1	0	0	0
부산	12	2	2	2	2	2	2
대구	6	1	1	1	1	1	1
인천	5	3	0	2	0	0	0
대전	5	5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2007년~2012년까지 지난 6년간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볼 경우, 전환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지역으로는 전북, 제주, 경남임. 전북이 837명, 제주가 561명, 경남이 324명의 전환규모를 보였고, 하위 3개 지역으로는 6년간 울산에서는 단 한명도 전환되지 않았고,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5명 전환됨.



<그림 4> 지난 6년간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전환 규모 (2007~2011 누적인원, 단위 : 명)

근로조건

1. 임금

1)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공무원)은 396만원, 무기계약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 대비 무기 계약은 50%, 기간제는 2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단, 이와 같은 평균임금의 비교는 자치단체별, 고용형태별 임금분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짐.

무기 계약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이루는 측면이 있으나 노동조건에서 큰 변화가 없어 ‘중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조사를 통해 무기계약이 정규직 월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116만원)은 통계청 “2012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143만원)에 비해 27만원이 적은 81.1%수준이고, 기간제 월 평균임금(160만원)에 비해 서도 44만원이 적은 것(72.5%수준)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음

<표 8>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정규직 대비 비율 (2012.03 기준, 단위 : 원, %)

	정규직(A)	무기계약(B)	기간제(C)	
			비율(B/A)	비율(C/A)
전체	3,960,478	1,982,084	50.0	29.5
서울	3,722,180	3,221,083	86.5	33.9
부산	-	-	-	-
인천	4,615,870	2,953,330	64.0	27.6
대구	4,351,894	-	-	30.5
대전	3,703,278	1,978,417	53.4	23.9
광주	3,525,507	2,008,262	57.0	35.8
울산	4,047,629	2,363,962	58.4	29.0
경기	4,595,170	1,135,977	24.7	24.2
강원	3,600,340	1,492,940	41.5	30.4
충남	3,960,920	1,452,530	36.7	29.1
충북	4,209,294	2,094,432	49.8	28.5
전남	3,539,030	2,005,320	56.7	31.3
전북	-	1,735,440	-	-
경남	4,128,528	1,582,018	38.3	25.5
경북	4,782,322	1,307,666	27.3	18.7
제주	4,407,930	1,462,420	33.2	28.0

※ “-”는 자료부존재(미파악)

광역자치단체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의 수준을 살펴보면,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의 임금수준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인천, 울산으로, 서울이 정규직(372만원)의

86.5%(322만원), 인천이 정규직(461만원)의 64%(295만원), 울산이 정규직(404만원)의 58.4%(236만원)수준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의 수준이 낮은 하위 3개의 지역은 경기, 경북, 제주임. 경기가 정규직(459만원)의 24.7%(113만원)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경북이 정규직(478만원)의 27.3%(130만원), 제주가 정규직(440만원)의 33.2%(146만원)로 나타났음. 경기의 경우는 무기계약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113만원)이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111만원)보다 2만원 높음.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을 정규직 월 평균임금과 비교해 보면,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3개 지역은 광주, 서울, 전남으로 광주가 정규직(352만원)의 35.8%(126만원), 서울이 정규직(372만원)의 33.9%(126만원), 전남이 정규직(353만원)의 31.3%(110만원)로 나타났고,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3개의 지역으로는 경북, 대전, 경기로 나타남. 경북이 정규직(478만원)의 18.7%(89만원)로 가장 낮고, 대전이 정규직(370만원)의 23.9%(88만원), 경기가 정규직(459만원)의 24.2%(111만원) 수준임.

2)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율

2007년 대비 2011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면, 정규직은 2007년도에 비해 월 평균임금이 39만원, 11.6%가 증가했으며, 무기계약은 30만원, 18.2%,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8만6천원 인상된 금액으로, 5년동안 8.8% 인상되었음.

지난 5년간 무기계약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증가율이 높은 상위 3개의 지역은 경남, 전북, 경기로, 경남이 2007년도에 비해 무려 66%(75만원) 증가해 2011년 월 평균임금으로 188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전북이 51%(55만원) 증가해 2011년 월 평균임금이 163만원이며, 경기와 강원이 각각 28.7%(34만원), 27.1%(30만원) 증가해 2011년 월 평균임금이 각각 151만원, 141만원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전남(9만원, 6.1%)으로 2011년 무기계약의 월 평균임금이 162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지역으로는 제주, 울산, 강원임. 제주가 42.9%(40만원), 울산이 41.1%(42만원), 강원이 32.2%(25만원)로 나타난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난 5년간 임금증가율이 0%(126만원)임.

<표 9> 2007년 대비 2011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증가액과 증가율
(2007~2011 12월 기준, 단위 : 원, %)

	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전체	391,935	11.6	308,414	18.2	86,364	8.8
서울	226,020	7.0	438,813	15.8	0	0
부산	624,550	18.8	-	-	-	-
인천	760,259	21.3	-	-	-	-
대구	479,483	13.5	-	-	281,500	29.5
대전	370,016	12.4	252,145	13.8	175,892	24.5
광주	690,570	21.7	377,587	25.1	184,688	19.6
울산	511,030	13.9	246,449	11.1	426,479	41.1
경기	629,380	17.2	336,857	28.7	42,230	4.3
강원	402,440	13.8	302,170	27.1	254,490	32.2
충남	289,660	8.2	177,840	16.2	177,840	19.9
충북	260,796	6.8	334,507	20.1	196,805	20.6
전남	222,350	6.7	92,960	6.1	99,386	10.2
전북	-	-	553,000	51.1	75,000	8.8
경남	569,355	16.1	749,333	66.0	218,602	28.3
경북	398,887	9.4	156,214	16.0	59,682	7.5
제주	543,020	15.3	246,510	18.4	401,380	42.9

※ 서울 정규직, 강원 무기계약, 제주의 기간제, 무기계약의 2007년 임금정보가 없어, 2008년 임금정보로 대체함(서울 정규직은 2009년 자료)

3)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상여금 지급현황

상여금은 기본급과 달리, 성과, 실적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므로 지역 간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지급여부와 관련 복지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정규직의 경우는 인천과 전북을 제외한 14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기 계약은 부산, 인천, 대구, 경기를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서울,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의 자치단체임.

<표 10> 2011년 연간 상여금 지급 현황 및 지급액(12월기준, 단위: 원, %)

	정규직(A)	무기계약(B)	기간제(C)		
			비율(B/A)	비율(C/A)	
전체	5,740,897	3,753,211	63.5	3,699,378	64.4
서울	6,097,090	7,072,000	116.0	3,840,000	63.0
부산	7,680,490	-	-	-	-
인천	-	-	-	-	-
대구	7,761,278	-	-	-	-
대전	2,565,114	4,533,850	176.8	-	-
광주	7,698,210	2,363,080	30.7	-	-
울산	-	4,085,443	-	-	-
경기	9,514,986	-	-	-	-
강원	2,603,520	1,997,740	76.7	-	-
충남	2,782,800	3,790,880	136.2	-	-
충북	7,210,483	3,894,682	54.0	5,919,600	82.1
전남	7,518,358	4,295,810	57.1	-	-
전북	-	5,014,820	-	1,000,000	-
경남	8,305,455	3,423,812	41.2	-	-
경북	2,725,436	3,276,350	120.2	3,789,980	139.1
제주	3,789,980	1,101,710	29.1	1,082,100	28.6

※ 위 통계는 해당 지역의 본청,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소방서 등의 합계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소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함. 대부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

비정규직 규모 공시와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무기계약 전환 조건 완화, 간접고용의 직영화 등 시급히 진행해야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과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우리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는 10,664명(2012.03 현재)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 중 10.3%에 해당하는 규모임. 특히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전체 고용 중 정규직(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1%p(90% → 87.9%)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의 비중은 21%p(10% → 12.1%) 증가했음. 비중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비정규직(무기계약 11.7%, 기간제 36.1%, 파견/용역 86.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 볼 경우, 총 2,418명(2007~2012 누적) 전환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전체 고용 중 무기계약의 비중은 2009년부터 4.7%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기간제와 파견/용역의 비중(2007년 -> 2011년 기간제 비중 1.2%p, 파견/용역 비중 0.8%p)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직접고용 업무를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으로 전환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임금 역시 고용형태별로 큰 격차를 보임. 정규직(공무원)은 396만원, 무기계약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 대비 무기 계약은 50%, 기간제는 2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임금의 상승율(2007~2011)을 보면 정규직이 11.6% 인상된 가운데, 무기계약이 18.2%, 기간제가 8.8% 인상됨. 상여금의 경우, 정규직과 무기 계약은 전반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가운데, 기간제의 경우 서울, 충북, 전북, 경북, 제주 5개의 자치단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번 조사 결과,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무기계약 전환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고, 도리어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공공부문은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첫째, 비정규직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매년 비정규직 사용규모와 근로조건을 공시해야 함
정보공개청구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비정규직 관리 전담부서가 없이 개별 사업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치단체별로 어떤 업무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음

둘째,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총액인건비제도는 해당 조직의 인건비의 합을 제한하는 제도임. 지속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이 인건비의 제한을 피해 사업비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충원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지난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01)”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의 인건비와 인력수요를 제한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함.

셋째, 무기계약 전환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함

현행 비정규직법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5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방침과 같이 과거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상시·지속업무인 경우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기 계약의 경우 고용은 보장되나 근로조건에서 큰 변화가 없어 ‘중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넷째, 파견/용역의 직영화로 간접고용 규모를 줄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함.

인건비 절감과 노동관계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간접고용이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간접고용(파견/용역)의 증가는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용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직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7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Ⅰ : 광역자치단체

발행일 2012. 07. 11

발행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임상훈 교수)

담당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800-5300

주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